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1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김선교 · 이현승
성일종 · 안철수 · 김 건
김석기 · 주호영 · 김종양
박정훈 · 송석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‘적국’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 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.

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(Non-state actors)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적을”을 “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에게”를 “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간첩) ① <u>적을</u> 위하여 간 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 하고,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.	제13조(간첩) ① <u>외국과 국내외</u> <u>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</u> ----- ----- ----- --.
② 군사상 기밀을 <u>적에게</u> 누설 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 다.	② ----- <u>외국과 국내외 단체</u> <u>및 비국가행위자에게</u> ----- 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